

서울시

군부대 '부패 닭고기' 납품업자 9억 배상 판결

냉동 보관 기간이 1년에 달하는 불량 닭고기를 군 부대에 제공한 납품업자가 국가에 9억8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국가가 K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밝혔다.

K조합은 강원도에 있는 한 육군부대와 200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닭고기 등의 육류를 122억여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조합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계획·생산한 물량을 공급하고, 계획·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K조합이 지정한 연계조합을 통해 납품 물량을 출하하도록 했지만 조합은 2007년 5월 S영농조합으로부터 닭고기를 공급받아 이를 군부대에 납품했다.

S조합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으로 닭값이 폭락했을 때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양수받은 닭고기를 냉동보관하다가 시세가 상승할 때 기존 냉동보관 닭을 군납하고, 군납용 생닭은 외부에 시판하는 곳이었다.

K조합 직원들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S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았고, 이 때문에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S조합의 냉동 닭고기 132톤 분량이 군 부대로 들어갔다.

2008년 1월 군 부대 측이 닭고기 일부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불량 닭고기 납품 행각이 꼬리가 잡혔고, K조합 직원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K조합 직원들은 도계 및 검수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양계농가의 닭 생육 실태도 점검하지 않았던 점 등 계약상 확인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위반 사실이 발생한 이후 조합이 보관중이던 냉동닭고기 1만2천2백25kg을 전량 매물처분한 점, 조합에서 납품한 닭고기 중 일부에만 부패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약정금액의 80%에 해당하는 9억8천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용인시는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에 적극 나섰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등의 축사를 현대화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09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성산한방포크 등 용인시축산물브랜드 농가를 중심으로 19농가에 축사 내부기자재 구입과 시설 개보수 자금 등 4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받은 곳은 양돈 농가 4곳, 낙농 농가 2곳, 양계 농가 13곳 등으로 급이·급수 시설 개보수, 벽면 환기시설, 지붕공사, 개체인식기 등을 보수하거나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시가 브랜드참여, 시설규모 등 기준을 마련해 농가별 사업일정을 정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60% 이상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다.

용인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여러 농가에 지원을 했다”며 “노후 시설을 현대화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브랜드 생산기반 확충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가가 되도록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9년 지원 기준은 200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가운데 30%는 국비 보조, 50%는 3년~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3% 저리 융자, 20% 자비부담으로 시는 농림수산물부의 올해 지침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농림수산물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1월초 공고해 평시 사육두수, 사업추진 가능성, 교육실적, HACCP여부, 수상경력, 소속브랜드 경영체 평가 등을 살펴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 폭설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 지원

충주시는 지난 1월 4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월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로 시는 오는 1월 14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시 재난대책위원회를 열어 시 예비비로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충주지역에서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농가피해는 완파되거나 반파된 가야금작목반의 봉방동 허방동 비닐하우스(2,640㎡)와 주덕읍 창전리 보온덮개형 양계장(1만1346㎡) 등이다. 양계장이 붕괴되면서

닭 3,000마리도 떼죽음을 당했다.

시는 각 피해농가 재산피해액의 35%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55%는 용자해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농가 자부담은 10%다.

시 관계자는 “재산피해액 32억원이 넘으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집계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소유자가 외지에 있거나 겨울철에는 관리하지 않는 인삼재배시설 등을 중심으로 피해사태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축·수산업에 72억 지원

충주시는 한·미 FTA협정 체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수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축산·수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축·수산사업에 모두 72억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경쟁력을 높이고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사환경 개선 등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양축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등 경쟁력 제고사업에 16억9천만원, 가축방역사업 7억9천2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사업 25억2천6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 9억6천800만원, 축사환경 개선사업 8억6천900만원, 내수면 어업활성화사업에 3억5천6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예산 투입 및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평, 닭 사육수수 줄어

증평군의 주요 가축 사육이 한우는 늘고 돼지·닭·젓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축사육 농가 일체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우는 300농가에 4천214마리, 돼지 21농가 2만8천690마리, 닭 56농가 36만9천79마리, 젓소 12농가 568마리 가 사육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2008년 말보다 한우는 늘어난 반면에 돼지·닭·젓소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규모는 한·육우는 19농가(50마리 이상)에서 1천91마리, 젓소는 5가구(50마리 이상) 343마리, 돼지는 14농가(500마리 이상) 2만7천130마리, 닭은 18농가(3천마리 이상) 36만8천500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

구미시, 브라질산 닭고기, 국내산 둔갑

구미지역의 한 대형예식장이 최근 수입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 출장소는 지난해 12월 8일 지역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펼쳐 소갈비와 닭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원평동의 한 대형예식장을 형사 입건했다.

이 예식장은 미국산 LA갈비와 브라질산 닭고기를 각각 호주산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식자재 공급업체 관계자는 “미국산 LA갈비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가격 차이는 크지 않지만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을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커 많은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이라며 “연말·연초 행사가 집중되는 기간 동안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일부 뷔페에서도 이같은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개업한 일부 대형 예식장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경우가 드러남에 따라 많은 행사가 열리는 대형 예식장 등 행사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원산지 표시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음 단속됐을 경우 고작 형사처벌로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영업정지 1주일의 처분마저도 수백만원에 불과한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3기 1등 맛집 100개 업소 선정

광주광역시가 맛의 고장 광주를 대표할 ‘광주 1등 맛집’ 100개 업소를 새로 선정해 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31일 대표음식의 맛과 전통성, 서비스, 시설 등이 뛰어나 남도음식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100개 우수 음식점소를 ‘제3기 광주 1등 맛집’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광주 음식문화를 홍보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광주 1등 맛집'을 선정해 2년간 홍보·관리해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말로 2기 '1등 맛집' 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 제3기 '1등 맛집'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등 맛집에는 한식이 78곳으로 가장 많고 일식 12곳, 양식 6곳, 중식 4곳이며, 한식에는 한정식 11곳, 쇠고기 11곳, 돼지고기 10곳, 오리·닭 16곳, 해물류 15곳, 기타 10곳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이번 선정된 '제3기 1등 맛집'에 대해 1월중 지정서를 교부하고, 맛의 고장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명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 소양교육과 관광안내교육을 실시해 광주음식의 이미지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이울러, 1등 맛집 선정위원회와 관련 협회, 관광·식품위생 관련부서 및 자치구 등과 함께 '1등 맛집'의接客 서비스 및 위생상태를 정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뉴캐슬병 청정지역 선포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정 제1종 전염병인 뉴캐슬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됐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대상으로 한 뉴캐슬병 청정화 사업을 추진해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청정지역 선포 요



건을 모두 갖춤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청정지역 선포식을 가졌다.

현재 뉴캐슬병 청정지역은 미국과 호주 등 모두 11개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제주도는 선포일로부터 6개월 뒤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할 예정인데, 지난 1999년에 돼지 열병과 오제스키병 청정지역으로, 2003년에는 소 결핵과 브루셀라 청정지역으로 선포했다.

축사현대화로 축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

제주시가 축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올해에 추진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주시 관내 한(육)우, 돼지, 젓소, 닭, 오리를 사육하는 전업농가중 70농가를 선정, 총 71억5천만원(국비 21억원, 지방비 15억5천만원, 융자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축사의 신개축 및 내부 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1개 농가에 21억원을 투입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